

# 국힘 “정책 실패” vs 민주당 “국조 불가”… ETF 공방 격화

국힘, 국조·특검 추진 필요성 제기  
범여권 조국혁신당도 비판의 목소리  
청와대, 책임자 경질론에는 거리 뒀

이른바 ‘물러코스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했고, 범여권에서도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따질 수 있는 자리는 국



김용범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정조사뿐”이라고 썼다.

장동혁 당 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ETF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밀어붙였다면 우리는 다른 길 의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으로 통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

신정책연구위원장 역시 자신의 SNS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되어서 안 된다.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뿔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

통령이 해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원흉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파면해야 할 텐데 그냥 두고 있다”며 “많은 30대분들이 파놓을 흘리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폐지 하지 않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우상향 국면으로 가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만든 도박판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ETF 국정조사·특검에 응할 생각이 없는 분위기다. 김성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책을 세울 때마다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저희가 그런(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입장에 공감하지 않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태도라고 본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야 한다”고 보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용범 경질론에 거리를 뒀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미 보완대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나이가 “지금은 시장 (상황)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내 수석이 나 다른 의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李 대통령 “폭염 끝날 때까지 비상 대응”

“인력·자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일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데 대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열린 폭염 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시

바라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도 했다.

남부 지역의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청년정책 대전환 예고… 맞춤형 지원 강화

李, 부처별 정책 연계성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까지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정부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연계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민주, 13일 본회의서 35개 법안 처리 예고

국민의힘 협조 여부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35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17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직전인 것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건 아무런 상관없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나’라고 말한 데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이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며 “부족한 점들은 법으로 보완할 것도 있고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도 있을 텐데 TF 중심으로 논의를 해가며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 정책을 세울 때마다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저희가 그런(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입장에 공감하지 않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 맘에 안 들면 (국정조사를) 하지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지적하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수 수습기자

## 국힘 지도부, 서범수·진종오 징계 수순

언행 심각성 공감, 엄중 조치 의견 모아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논란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언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절차를 통해 긴급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은 그와 같은 당헌·당규 절차가 없다”며 “상처를 입으셨을 국민과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지도부 가운데 일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서·진 의원을 겨냥해 “국민을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럽다”며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탈당으로 피하기보다 윤리위 절차로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뉴시스